與 조작기소특검법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 '맞불'… 정국 급랭

민주당 "공소 취소 조항 제거 야당 더이상 반대할 명분 없어" 국힘, 규탄집회·장외투쟁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공소취소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과정의 위법 행위를 밝혀야 한다며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국회 규탄집회와 장외투쟁,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조작기소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전날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여야는 지난 4일에 이어 이날에도 조의장 주재로 법안 상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주택공급 관련 법안 등의 상정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되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 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오전 다시 열린 회동에서도 여야 합의는 불발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회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문제 삼던 공소 취소 조항은 완전히 제거했고 모든 공소와 관련된 내용을 제거했다. 그래서 야당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더불어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민주유공자법, 주택공급 관련 법안의 처리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찬성 토론으로 맞서는 한편, 종결 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종결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대응 방안에 대해 "같이 무제한 토론을 할 것"라고 말했다. 이어 종결 표결을 곧바로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내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정도 (예상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대통령 재판취소법'으로 규정하고 원내외 투쟁 일정을 구체화했다. 본회의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특검법 처리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이 특검법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짓고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강요하는 최악의 재판개입 유도"라며 "국민과 함께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추가된 데 대해서는 "친문(친문재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문재인 정권의 패륜적 범죄까지 없애주겠다는 면죄부 나눠 먹기"라며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의 추악한 밀실 거래로 탄생한 최악의 역사 조작 기도"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규탄대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7일 오후 3시에는 서울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일정을 잡은 배경에 대해 "(공소취소)특검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장외투쟁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라며 "의원들은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에도 상황을 지켜보며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결의안 2건이 처리됐다.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총투표수 167표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초광역전략산업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은 찬성 145표, 반대 10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찬성 토론으로 대응하면서 종결 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는 오는 6일 오후 종결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여야, 반도체 호황에 쌓인 세수 놓고 격돌

예산결산특별위 종합정책질의 "국채 갚아라" vs "성장에 투자"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세수가 걷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5일 미래대응기금으로 여윳돈을 쌓아놓는 대신 국채를 상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세수가 많이 나올 때 국채를 상환해서 금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지 말고 국부펀드를 만들거나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초과 세수를 두고 "반도체가 이재명 정부에서 잘 해서 됐나"라며 "기업이 잘 해서 늘어난 부분을 갖고 공돈이 생긴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강변했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기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교육·인재 계정을 담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왜 이를 제외하고 굳이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기존의 객관적 시스템이 있는데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구조를 만드냐"며 "국민들이 볼 때는 정부가 쌈짓돈 만드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도 "기금 여유 재원이 104조원이고 국가채무 발행이 106조원이다.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리고 한쪽에는 여유 재원을 쌓아놓겠다는 것"이라며 "한쪽에는 빚을 내고 한 쪽에 쌓아 놓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박홍근 장관은 "통상적 지출과 이례적 수입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다른 나라의 선례도 있고 국가채무 상황을 각자 다르게 보기 때문에 (기금의) 투자나 활용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종합정책질의에서 성장과 국가채무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민 소통과 야당 설득을 박홍근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있지 않냐"고 묻자 박 장관은 "철저하게 추이와 전망까지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李 대통령,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제48회 상하이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오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李, 수능 앞두고 "스마트 안경 단속 만전"

교육부, 부정행위 대응 계획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최근 논란이 되는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기기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지시했다. 또 '창업 사회'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필요한 교육 과정 개선·재정 지원 확대·규제 혁신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수능이 예정된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장착된 스마트 안경이 화두로 떠올랐다. 수험생들이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토익 등 어학 시험뿐 아니라 국가 기술 자격시험과 중·고등학교의 지필고사, 일부 대학 논술 시험 등 스마트 안경을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스마트 안경 활용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 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 부정행위 적발자에 대해서도 수능에 준하는 조처를 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과실을 전(全) 국민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창업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바이오 R&D 투자·규제 혁신 '한목소리'

›› 1면 '규제 풀고 AI 융합'서 계속

묵 대표는 정부 R&D 자금 집행 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주문했다. "정부 지원이 보조금 형태로 뿌려지면 '눈먼 돈'이 되어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며, "보조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성공불융자 등 회수 메커니즘을 구축해 자금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지원 대상 선정 평가 제도 역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그는 "공정성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지는 '나눠먹기식' 지원을 배제하고, 신약 개발 경험이 없는 대학 교수가 임상 과제를 평가하는 파행을 끊어야 한다"며 "해외 전문가 초빙 등 철저히 검증된 평가 체계를 통해 임상 2·3상을 수행할 수 있는 '빅파마·바이오벤처 연합군'에 집약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패 데이터가 진짜 자산"

서울대학교 이현숙 교수는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높이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정책의 중요성을 알렸다. 인공지능 신약개발의 핵심은 '실패 데이터'에 있다.

이 교수는 "신약 후보물질의 90% 이상이 임상 단계에서 실패하지만, 이 실패 정보야말로 인공지능을 특화 모델로 만드는 가장 소중한 학습 자산"이라며 "실패 데이터까지 데이터관리계획(DMP)에 등록·학습시킨 모델만이 독보적인 기술 특화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D서 상업화까지 전주기 혁신"

마지막 발표자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양성일 규제특위 위원장은 바이오 규제 혁신 가속화 원칙을 "안전은 더욱 깐깐하게, 절차는 더욱 과감하게"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포괄적 네거티브 및 연구 초기부터 허가·평가를 함께 다루는 사전 규제설계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